

남북한 주민의 통일인식 비교 분석*

김병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최경희(동경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통일과정에 필요한 구성원들의 가치와 태도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남북한 주민이 갖고 있는 통일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인식을 통일 필요성과 기대감, 남북한 상호인식, 문화적 차이와 인지도, 남북교류정책 등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남북한 주민의 통일인식은 통일의 당위성과 기대이익, 교류정책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상호인식과 이질성, 인지도 등에서는 높은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통일 당위성에 대한 생각은 남한에 비해 북한주민이 월등히 높으며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 기대감도 북한주민이 훨씬 높게 갖고 있다. 때문에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정치대화, 인도적 협력 등 남북 간 교류정책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도 북한주민이 남한에 비해 월등히 높고 교류와 지원 정책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한은 여전히 서로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상호간에 불신과 불안감이 높게 자리 잡고 있어서 협력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적대/경계 대상이라는 양면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러한 양극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남북한은 남북주민의 이러한 통일인식의 현실을 토대로 대북·통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의 효과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남북한 주민간에 형성되고 있는 상호불신과 불안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통일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앞당기고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나아가 남한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남북대화 정책을 적극

*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0-361-A00017).

개발하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호감도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지원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통일의식, 통일의식조사, 주민의식, 상호인식, 상호인지도, 교류정책, 대북지원

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목적

통일은 남북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목표이자 국가의 미래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대화를 재개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통일에 대한 당위론과 원칙은 정당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반드시 온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내적으로 통일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통일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도 2012년 새로운 김정은 체제를 출범하고 ‘통일강성대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강성국가의 장기목표를 통일과 연결지으며 민족담론을 적극 동원하는 대남 통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들의 통일 의식은 분단 70년을 거치면서, 특히 탈냉전 20년 동안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약화되는가 하면 통일을 부담으로 여기는 의견이 많아지고 통일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거나 민족 편집증적 행태로 비춰지기 십상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분단환경에 익숙해졌고 전쟁 이

후 태어난 세대들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분단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든 혹은 수동적으로 적응하였든 간에 많은 한국인들은 분단의 환경을 그리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형성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구성원들의 통일의식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통일을 통해 보나온 삶을 추구하려는 구성원들의 열망과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성원들이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통일의 방식과 과정, 심지어 통일여부 그 자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통일 과정에서 보았듯이 동독주민들의 서독편입 선택이 통일의 중요한 과정이라면 이러한 세계사적 추세로 볼 때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남한에 편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식과 태도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일과정에 필요한 구성원들의 가치와 태도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 절에 설명하겠지만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경험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최근 4~5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일의식은 통일문제 전반에 대해 남북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의식과 태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즉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단편적인 의견에 국한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존재인식, 포용성, 신뢰도, 인지도 등 통일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를 포함하여 대남인식, 대북인식 등과 같은 상대방에 대한 상호인식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통일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의식, 경제의식, 정치의식 등과 같은 수준에서 통일에 관한 전반적

인 생각과 태도를 지칭한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인과 북한인이 갖고 있는 통일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자료와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2011년 기간에 실시한 한국인과 북한인에 대한 통일의식조사 설문결과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는 Gallup한국에 의뢰하여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자료이며, 북한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는 탈북자 면접을 실시한 것이다. 한국인에 대한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탈북자 면접조사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2008년 7월과 2009년 10월에 하나원 교육생 각각 296명과 370명을 대상으로, 2011년 4~6월에 2010년 이후 탈북자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통일의식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조사한 것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본추출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을 정확히 반영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대 1 개별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탈북자의식조사의 경우에는 면접 대상자 선정이나 표집방식에서 여러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의 자료는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확보한 것이고, 2011년에는 하나원 방문조사가 허용되지 않아 하나원 퇴소자 가운데 2010년 이후 탈북자만을 스노우볼 샘플링 방식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2011년 조사에 응한 탈북자들은 제3국 경험여의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샘플과는 성격이 다르며 자료

의 해석과정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자 샘플은 북한주민 모집단과 비교할 때 성별과 지역에서 큰 차이가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샘플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북한인에 대한 정례적인 의식조사가 없고 의식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대단히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인의 통일의식을 한국인과 비교·분석하는 본 연구의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통일의식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즉 통일 필요성과 기대감, 남북한 상호인식, 문화적 차이와 인지도, 남북 교류정책 등 네 영역을 차례로 살펴본다.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감은 통일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파악해 보는 항목이며, 상호인식은 남북 상호간 호감과 불신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문화적 차이와 인지도는 남북한 주민들이 생활, 역사, 언어, 가치관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며 실제 변화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부분이며, 마지막 지원정책은 남북한 주민들이 교류·지원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평가해보는 영역이다.

1) 북한주민의 인구구성에서 여성은 51.3%를 차지하나 탈북자 샘플에서는 84%(2008), 71%(2009), 65%(2011)를 차지하여 여성이 과표집되어 있고, 출신지역도 북한주민 모집단에서 함경북도 인구비율은 10.0%인데 비해 탈북자 샘플에서는 함경북도 출신이 60~70%를 차지하는 등 탈북자 샘플은 모집단의 성별, 지역별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북한주민 모집단과 탈북자 샘플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성, 지역 변수만큼 현격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CBS, 200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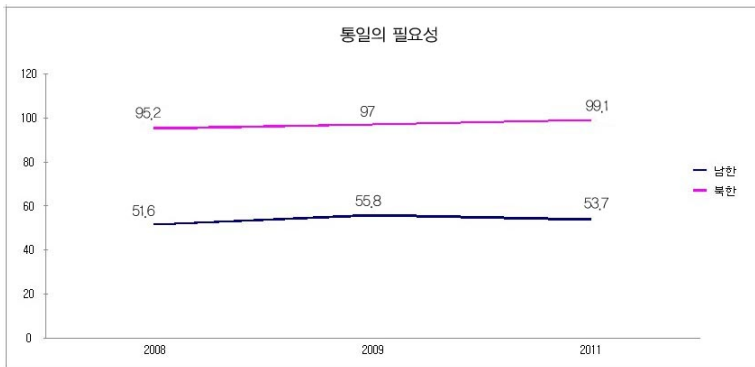
II.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감 비교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남북한 주민 간에 매우 달랐다. 2011년의 예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한주민들은 53.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주민들은 99.1%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남한주민들은 약 절반 정도가 통일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북한주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를 보더라도 북한주민은 ‘매우 필요하다’에 95.5%가 공감한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28.7%에 불과하였다. 북한주민은 또한 통일을 ‘매우 원한다’는 응답도 91.2%로 높아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한주민들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1.3%나 되고 ‘반반이다,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25.0%나 되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약화된 반면, 북한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0.9%), ‘그저 그렇다’(0%)는 의견이 거의 없어 통일을 반대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없고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열망하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남북주민 간의 이러한 현격한 차이는 최근 몇 년간의 흐름에서도 뚜렷이 발견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주민들의 응답은 2008년에 51.6%, 2009년에 55.8%, 2011년에 53.7%로 약 50~55%의 주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2008년에 95.2%, 2009년에 97%, 2011년 99.1%로 절대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남한에서도 1990년대에는 91.6%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민족의 재결합’(59.0%)과 ‘이산가족 고통해소’(11.0%) 등 같은 민족이며 동포라는 정서가 당위론적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²⁾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통일의식이 변화하여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었고 그 이유도 ‘전쟁발생방지’(27.3%), ‘선진국이 되기 위해’(17.6%) 등 실리적인 문제들이 부각되었다.³⁾ 북한주민들이 99%라는 높은 비율로 통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갈망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물론 같은 민족이며 동포라는 민족주의 정서와 당위론적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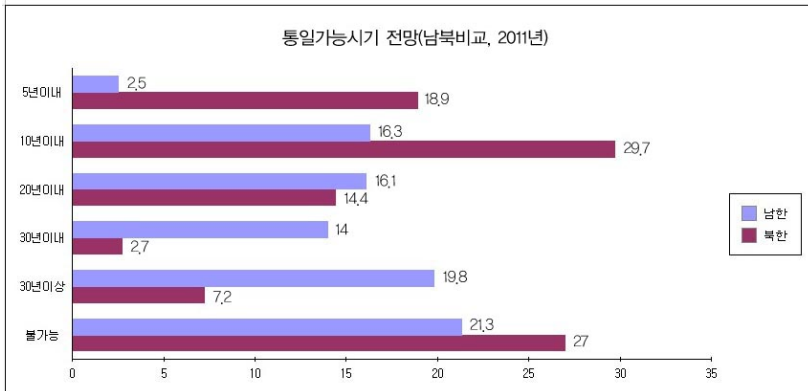
2. 통일예상 시기

통일의 예상 시기에 대해서도 남북한 주민들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
- 2) 최수영·김성철·김병로·이우영,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84~90. 1990년대에는 전쟁방지(14.6%), 선진국진입(14.2%) 등 실리적 이유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 3) 박명규 외, 『통일의식조사』 각 연도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2010).

우선, 남한주민들은 통일의 예상 시기를 5~10년 이내로 보는 단기적 전망보다는 20년 혹은 30년의 장기적 전망이 많았으며 아예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그림 2>에 나타난 2011년 조사결과를 보면, 통일 예상 시기를 5년 또는 10년 이내로 보는 견해는 각각 2.5%, 16.3%였고, 20년, 30년 이내로 보는 의견은 각각 26.1%, 14.0%였으며,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이라는 의견도 각각 19.8%, 21.3%나 되었다. 남한주민의 절반 이상(55.1%)이 20년 이내에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지만 지난 5년의 추이를 추적해 보면 상당한 변화를 겪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년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 통일이 5~10년 이내로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이라는 의견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특히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13.3%(07년)→22.3%(08년)→29.8%(09년)→20.6%(10년)→21.3%(11년)로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2009년 개성근로자 억류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사라지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급격히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남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의식을 더 강화하지는 않았다. 이는 천안함 사건처럼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통일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슬로건으로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교육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2〉 통일예상 시기 전망 (남북비교, 2011)

반면,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보다 통일 시기를 가까운 장래에 실현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에서 ‘10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으로 보는 견해는 각각 14.4%, 2.7%, 7.2%로 많지 않았다. ‘5년 이내’와 ‘10년 이내’라는 단기전망에서 북한은 각각 18.9%, 29.7%로 남한의 2.5%, 16.3%에 비해 매우 높았다. 반면, ‘30년 이내’와 ‘30년 이상’이라는 장기전망에서는 북한이 각각 2.7%, 7.2%로 남한의 14.0%와 19.8%에 비해 매우 낮았다. ‘불가능하다’는 극단적 비관의식은 북한이 27%로 남한(21.3%)보다 높았다.

시계열로 살펴보면 통일이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높으나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대신 30년 이내와 30년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조금씩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즉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2008년 36.9%, 2009년 49.7%, 2011년 29.7%로 최근에 급격히 감소한 반면, ‘30년’(이내와 이상의 합계)이라는 견해는 7.2(08년)→4.6%(09년)→9.9%(11년)로 상승하였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28.3%(08년)→15.9%(09년)→27%(11년)로 2009년에 낮아졌다가 2011년에 다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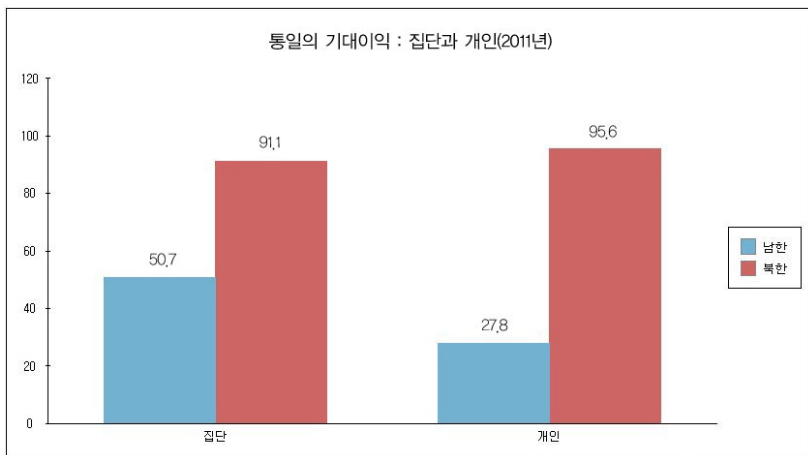
남북주민의 통일의식을 비교하면, 북한주민은 5~10년의 단기적 통일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고, 남한주민은 30년 정도로 통일의 시기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들도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룰수록 통일의 시기를 조금 멀게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남한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는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된 현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볼 때 남북갈등과 대립이 격화될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통일에 대한 전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통일의 이익 기대감

통일의 이익 기대감은 통일 필요성 인식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주민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남한주민의 통일 기대감을 살펴보면,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50.7%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9.3%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7.8%만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2.2%로 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이익 기대감은 매우 낮았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주민의 의식과는 달리 북한주민은 통일로부터 얻을 이익 기대감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었다. 통일이 북한사회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한 북한인 응답자는 91.1%,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8.9%에 불과하였다. 또한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5.6%인

반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5%로 현저히 적은 수로 나타났다. 남한주민들은 통일이 집단적 수준에서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에게는 거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북한주민들은 집단적 수준에서나 개인적 수준에서 모두 통일이 가져올 이익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남북한 주민의 통일 이익 기대: 집단과 개인(2011)

남북주민들을 비교해 보면, 남한주민들의 통일 이익 기대감은 집단수준에서는 약 50%, 개인수준에서는 약 30%인데 비해, 북한주민들은 집단과 개인수준에서 모두 약 90~95%라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남한에 비해 북한이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한주민들은 통일이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식이 강한 반면, 북한주민들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계기로 남한으로부

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북한사회는 물론 개개인들이 더 부흥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컨대, 남한주민들은 통일문제를 현실적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통일 의지와 기대감이 점차 줄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통일을 계기로 민족부흥과 개인의 발전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위적이고 희망적인 통일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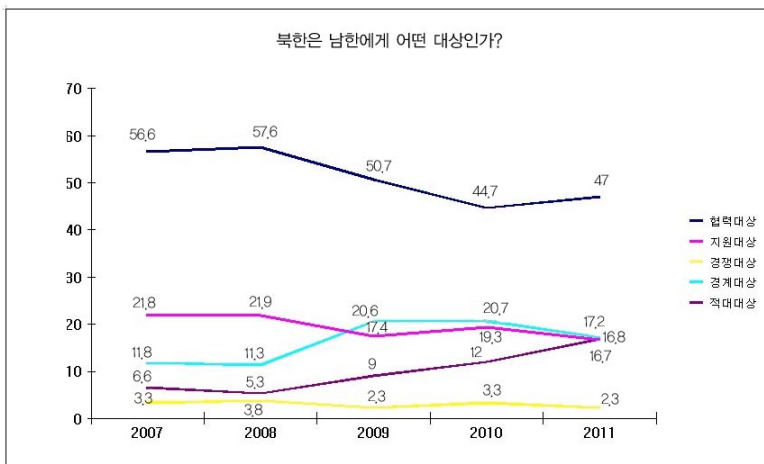
Ⅲ. 남북한 상호인식 비교

1. 상대 존재의 인식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상호관계는 적대, 경계, 경쟁, 협력, 지원(포용)이라는 다섯 유형으로 상정하였다. 이 다섯 유형은 적대와 포용 사이의 연속적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장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적대’라고 한다면 가장 포용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경계’와 ‘경쟁’, ‘협력’은 ‘적대’로부터 ‘지원’으로 발전하는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의 조사결과를 남북 간에 비교해 보면, 남북한 모두 상대를 ‘협력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많았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은 47%이며,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은 50.5%로 남북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원대상과 경계대상, 적대대상에서도 남북한 모두 비슷했다. 각각에 대해 남한은 16.7%, 17.2%, 16.8%였고 북한은 11.4%, 21.0%, 15.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로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남한이 2.3%, 북한이 1.9%로 둘 다 매우 낮아 서로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의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남북한

의 상대 존재인식은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형성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남한은 ‘협력대상’ 응답이 57.6%(08년)→50.7%(09년)→44.7%(10년)→47.0%(11년)로 2008년 이후 2년 연속 13%가 감소하던 상태에서 2011년에 2.3%가 증가함으로써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의견은 21.9%(08년)→17.4%(09년)→19.3%(10년)→16.7%(11년)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2.6% 감소하였다. 반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11.3%(08년)→20.6%(09년)→20.7%(10년)→17.2%(11년)로 상승하였고,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도 5.3%(08년)→9.0%(09년)→12.0%(10년)→16.8%(11년)로 높아졌다. 2010년까지는 ‘협력대상’이 감소하는 만큼 ‘적대대상’ 혹은 ‘경계대상’이 증가하는 상반된 관계를 보여 왔는데, 2011년에는 ‘협력대상’과 ‘적대대상’이 동반 상승하는 특이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지속되던 비판적·부정적 대북인식의 흐름이 2011년을 기점으로 ‘협력’과 ‘적대’로 양극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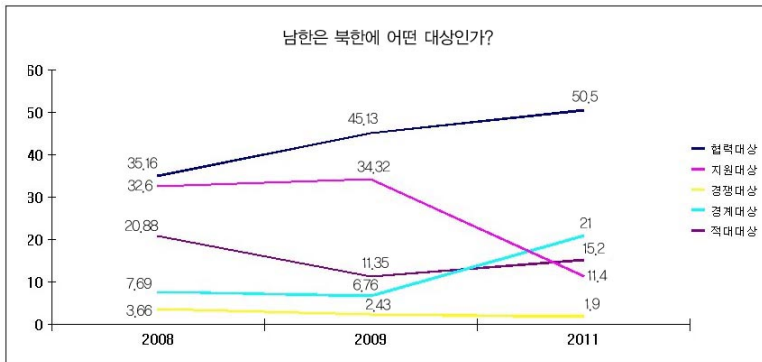


〈그림 4〉 남한의 북한존재 인식

한편, 북한주민들의 상대존재 인식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남한이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이 낮아지고 협력대상이라는 의식이 높아졌다. 즉 남한을 ‘지원대상’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각각 32.6%(08년)→34.32%(09년)→11.4%(11년)로 급격히 낮아진 반면, ‘협력대상’으로 답한 사람은 35.2%(08년)→45.1%→50.5%(11년)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주민이 남한을 지원대상이라고 인식했던 틀에서 벗어나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남한을 ‘경계대상’으로 간주하는 의견이 7.7%(08년)→6.8%(09년)→21.0%(11년)로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최근 2년 사이에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경계의식이 급상승한 것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남북한 갈등이 격화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공식언론 매체나 교육기관 등이 남한 국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과 한국의 5·24조치 등을 극렬히 비난하는 등의 선전선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북한주민들도 남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의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경계/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35.2%에서 50.5%로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이처럼 대북인식이 남북한에서 양극화되고 있는 이유는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사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남북한이 무력충돌을 겪으면서 한편에서는 경계와 적대 의식이 강화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협력관계 유지를 바라는 희망적 사고가 함께 형성됨으로써 양면적 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를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남한주민들의 대북인식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북한과 협력적 관계를 원하는 희망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남북관계의 갈등적 상황 속에서 남북한이 서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북한의 남한존재 인식

북한을 대변하는 표본수가 작아 요인별 통계분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남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응답자 가운데 2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 즉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 중에 60대는 9명 중 6명(66.6%), 40대는 15명 중 9명(60%), 30대는 29명 중 16명(55.1%), 20대는 37명 중 18명(48.6%), 50대는 14명 중 4명(28.5%)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대상’ 인식도 세대별로 보면 20대 2명(5.4%), 30대 3명(10.3%), 40대 3명(20%), 50대 3명(21.4%), 60대 6명(66.6%)으로 나타나 젊은층으로 갈수록 남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적대’와 ‘경계’ 의식은 연령별 표본수가 너무 적어 분석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젊은층이 남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지 않은가 추론해 본다.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남한에서도 발견된다. 즉 20대

의 젊은층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물론 남한에서는 30~40대의 젊은층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에 비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20대 신세대는 오히려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같은 대북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20대의 보수화'라는 특이한 경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가장 젊은 20대의 연령층에서는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회의적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의 젊은 세대는 '한국'과 '조선'이라는 자기 체제의 국가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젊은 세대가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남북한 간에 상대존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력대상'이라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남(47%)과 북(50.5%)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로를 적대/경계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중이 높아졌고 북한에서는 남한을 경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급증했다. 그 결과 남북한 주민들은 상대방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하면, 경계와 적대 의식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상호간에 경쟁대상이라는 의식은 거의 없으며, 지원대상이라는 응답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북한 주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의식구조가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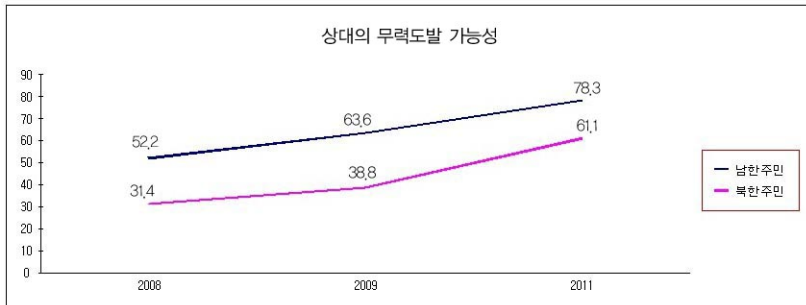
2. 무력도발 가능성

남북한 상호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상호간 무력도발 가능성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남한주민의 의식을 살펴보자. 남한주민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78.3%)는 응답이 “없다”(21.7%)는 응답보다 네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진행한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5년을 비교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59.7%(07년)→52.2%(08년)→63.6%(09년)→67.3%(10년)→78.3%(11년)로 변화했다. 이는 2009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11.4%가 높아졌던 전쟁 불안감이 2011년에 다시 11%가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북한주민도 마찬가지로 남한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31.4%(08년)에서 39.1%(09년)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 61.1%로 급증하였다. 2009년도에 북한주민이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것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09.5.25)으로 야기된 대외적 긴장과 두 차례의 연이은 전투(09년도 150일전투, 100일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단학습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⁴⁾ 더구나 2011년 들어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을 매우 높게 인식한 것은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포격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고 하는 북한정부의 선전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⁵⁾

4) 김인수 “150일전투와 당세포,” 『근로자』, 2009년 제8호 (누계 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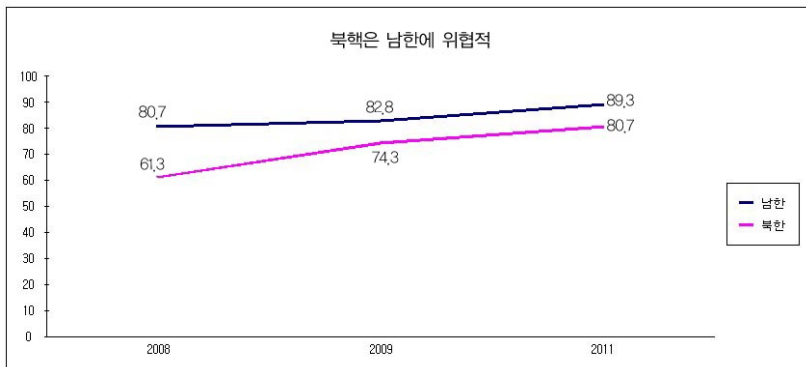
〈그림 6〉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북비교)

3. 핵무기 위협

먼저 남한주민의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35.3%, “다소 위협을 느낀다” 45.4%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높게(80.7%) 나타났다. 지난 5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은 68.2%(07년)→61.3%(08년)→74.3%(09년)→73.8%(10년)→80.7%(11년)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위기의식이 2011년에도 지속되었다. 남한의 경우에는 2009년 북한의 핵실험이 위기의식을 13% 끌어 올렸으나 천안함 사건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연평도 사건은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북핵 위협의식도 7%가 높아졌다. 북한주민들도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적일 것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였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2008년 80.7%, 2009년 82.8%, 2011년에는 89.3%로 매우 높았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2010년 11월 24일,” 『로동신문』, 2010년 11월 25일.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북한 핵의 위력과 파괴력에 대해 높게 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남한주민들은 80.7%가 북핵이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반면, 북한주민은 89.3%가 북핵으로부터 남한주민들이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북한주민들이 북한 핵이 남한에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과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핵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핵보유를 대남 및 대미의 방어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설득기제를 통해 교육받고 학습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된다.⁶⁾



〈그림 7〉 북핵 위협의식

6)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2003년 1월 10일 NPT(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후 두 차례 핵실험을 진행(2006년 10월과 2009년 5월)함으로써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꼭 들어차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었다. 공화국의 핵보유가 가지는 억제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으로 억제해나가는 현 단계에서의 핵위협제거노력이다.”라고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조선반도와 핵-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로동신문』, 2010년 4월 22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한은 여러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력대상’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50% 정도 갖고 있고 ‘경쟁대상’이라는 의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적대’와 ‘경계’ 대상이라는 의식은 강해져 5년 전만 해도 남한주민들의 대북 적대/경계 의식은 6~12% 정도로 낮았으나 현재는 각각 16.8%, 17.2%로 높아졌다. 북한주민들의 대남 경계의식도 2009~2011년 사이에 6.8%→15.2%로 급증하였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남한은 78.4%, 북한은 61.1%를 기록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도 남한주민(89.3%)과 북한주민(80.7%)이 모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상대방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이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동반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적대/경계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IV. 문화적 차이와 인지도 비교

1.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

남북주민의 문화적 차이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거방식과 생활수준, 역사인식, 언어사용, 생활풍습, 가치관 등의 영역에서 남북주민 의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남한주민들의 응답을 먼저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3.9%), 생활수준(96.6%), 법률제도(88.3%), 언어사용(90.7%), 생활풍습(88.3%), 가치관(93.6%)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남한주민들의 남북동질성 인식은 각 영역에서 2009년에 큰 폭으로 낮아진 이후 2010년에 약간 상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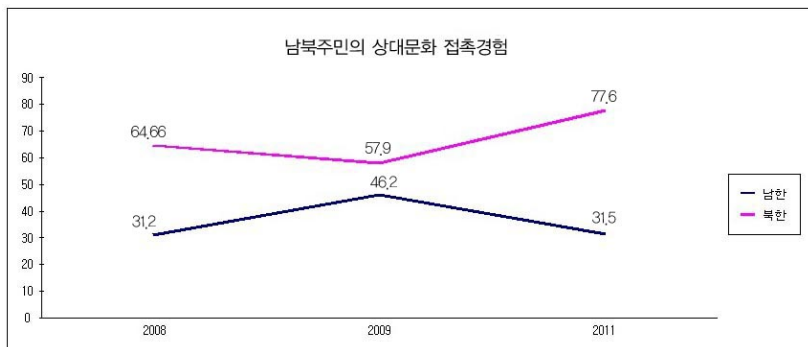
였으며, 2011년에는 작년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2011년에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남북의 동질성 인식을 촉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주민들도 남북한 간에 선거방식(96.2%)과 생활수준(97.3%), 언어사용(94.4%), 생활품속(95.3%), 역사인식(93.4%), 가치관(93.2%) 등의 모든 분야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 시계열로 보아도 이러한 의식에 큰 변화는 없다. 선거방식에 대한 차이를 보면 2008년, 2009년, 2011년 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96.5%(08년)→93.5%(09년)→96%(11년)로 남북한 선거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생활수준에 대해서도 94.8%(08년)→87.4%(09년)→97.2%(11년)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고, 언어사용에 대해서도 93.3%(08년)→95.1%(09년)→94.4%(11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남북한 간 생활품속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도 87.65%(08년)→87.3%(09년)→95.2%(11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95%의 일관된 응답율은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가 매우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남북한 주민들은 남북한 간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에 대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와 역사, 경제와 생활수준, 언어와 생활품속, 가치관 등 모든 영역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모두 심각한 차이와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도 95%라는 높은 수준으로 이질화되어 있을 것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과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 간에 교류와 왕래가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간의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질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교류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갈등과 다툼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체제의 차이와 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문화접촉 경험

남북한 주민의 상호 접촉 경험과 문화적 친숙도를 살펴보았다. 남한주민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남북교류가 단절되고 인적 왕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 간 차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31.5%로 2009년의 46.2%나 2010년의 37.4%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40.8%(07년)→31.2%(08년)→46.2%(09년)→37.4%(10년)→31.5%(11년)로 2009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남북왕래의 단절과 인터넷을 통한 북한관련 정보의 통제로 북한서적과 매체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문화 접촉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새터민을 만나보았거나 북한방문경험, 지원단체 참여경험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8.9%(07년)→9.3%(08년)→10.9%(09년)→13.8%(10년)→16.2%(11년)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에 새터민 입국이 늘어나면서 새터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8〉 남북주민의 상대문화 접촉 경험 (남북비교)

반면, 북한주민들은 남한문화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친숙하게 느꼈다는 응답이 많았다.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접촉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주 접한다’고 답한 비율은 2008년 25.4%, 2009년 23.3%, 2011년 44.6%로 증가했고, ‘한두 번 접한다’고 답한 사람은 39.2%(08년), 34.6%(09년), 33%(11년)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남한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4.7%(08년), 57.9%(09년), 77.7(11년)로 남한주민의 북한문화 접촉 경험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러한 높은 접촉 경험이 탈북자 샘플에서 오는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북한에 남한문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흘러들어가고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변화 요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 연령별로 분석해 보았다. 남한에서는 북한문화 접촉 경험이 연령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남한문화 접촉 경험이 있는 북한 사람들은 30대 30명 중 18명(60%), 20대 38명 중 18명(47.3%), 40대 16명 중 6명(37.5%), 50대 15명 중 5명(33.3%), 60대 12명 중 3명(25%)으로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남한문화를 자주 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남한문화를 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분포에서도 대졸 12명 중 9명(75%), 전문대졸 24명 중 16명(66.6%), 고졸 75명 중 24명(32%)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남한문화 접촉 경험이 많았다. 북한에서는 학력이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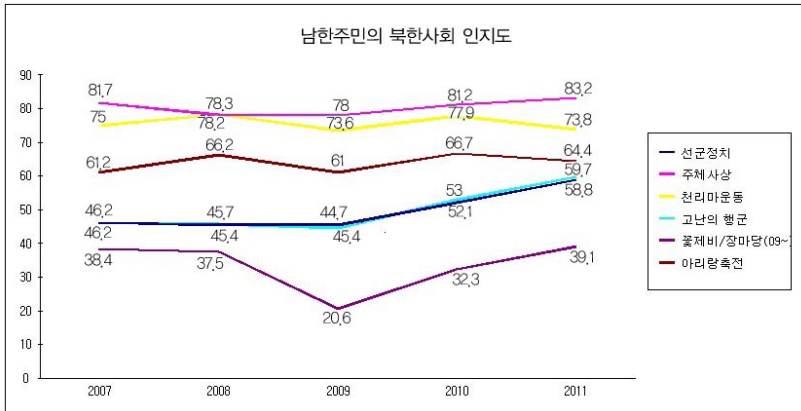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최근 2년간 남한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57.9%에서 77.6%로 20%가 늘어난 반면, 남한주민들의 북한문화 접촉 경험은 46.2%에서 31.5%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상대문화의 접촉 경험 비율에서도 북한이 남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의 추세도 북한의 문화접촉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상식의

로 납득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개방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탈북자 샘플에서 오는 오류일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이는 아마도 남북한의 정책적 차이에서 오거나 세계적 문화 흐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에 이르러 북한방송이나 북한매체를 적극 차단하고 있는 남한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보면 전근대적이며 이념에 경도된 북한문화가 남한에 어떠한 매력을 주지 못하는 반면, 개방적이며 상업적인 남한문화는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상호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관련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2011년에는 2010년에 이어 대체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들은 선군정치(58.8%), 주체사상(83.2%), 천리마운동(73.8%), 고난의 행군(59.7%), 장마당(39.1%), 아리랑축전(64.4%)에 대해 팔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63.1%였다. 대체적으로 2008~2009년에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줄어들었으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2011년에 소폭으로 상승하였다. 2011년에 북한 인지도가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통일부가 통일준비 및 통일공론화 사업 등 통일교육 쪽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하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북중관계가 활성화되면서 2010년 5월과 8월, 2011년 5월 세 차례나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이루어지면서 북한관련 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된 데

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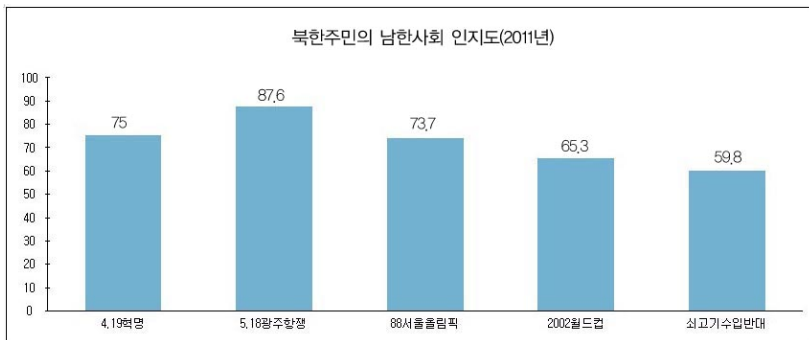


〈그림 9〉 남한주민의 북한사회 인지도

한편,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지도는 남한관련 5가지 사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1년도 조사에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현대사 주요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5.18광주항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7.6%, ‘4.19혁명’에 대해서는 75.0%, ‘88서울올림픽’은 73.7%, ‘2002월드컵’은 65.3%, ‘쇠고기 수입반대/촛불집회’는 59.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북한주민들은 1980년 ‘5.18광주항쟁’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4.19혁명’을 알고 있었다. 이는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남한의 현 정부와 남한주민을 분리하고 투쟁대상과 화합의 대상을 구별해서 교육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5.18광주항쟁’의 경우 30년 전의 사건이지만 현재와 구분 없이 강조함으로써 남한정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⁷⁾ 1960년 ‘4.19혁명’도 마찬가지로 남한정부

7) “광주항쟁정신 계승! 공안탄압분쇄! 이명박정권 퇴진!,” 『민조조선』, 2009년 5월 19일 ; “자유의 광주 만세!,” 『민조조선』, 2010년 5월 18일, “5·18의 정신을 이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⁸⁾ 반대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 ‘최고기수입반대촛불시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률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월드컵’과 ‘88서울올림픽’은 중간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 사건들은 ‘5·18광주항쟁’이나 ‘4·19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달리 남한사회의 경제적 부유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선전의 역효과를 고려하여 북한에서 많이 알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10〉 북한주민의 남한사회 인지도(2011년)

평균적으로 보면 남한주민의 북한 인지도는 60.6%이며 북한주민의 남한 인지도는 72.3%로 북한주민이 남한을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는 남한주민이 북한을 아는 것보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면 일반적인 상식과 괴리가 있다.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개방적이며 북한관련 뉴스를 많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

어,” 『민주조선』, 2011년 5월 18일.

- 8) “4·19정신으로 매국반역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 『로동신문』, 2009년 4월 19일 ; “4·19정신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자,” 『로동신문』, 2010년 4월 19일 ; “4·19정신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민주조선』, 2011년 4월 19일.

된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상식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 역시 탈북자 샘플에서 오는 오류일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남한과 북한의 관련 문항을 잘못 선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단적인 예로, 남한의 언론매체가 전달하는 북한관련 소식은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비율로 보면 북한이 남한소식을 전하는 비중보다 훨씬 적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6분의 1을 ‘남조선소식’으로 할애하는 반면, 남한의 신문전체에서 북한소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또한 남한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체사상과 천리마운동은 각각 81.2%, 77.7%로 북한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5.18광주항쟁’(87.6%), ‘4.19혁명’(75.0%)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지도에 대해 보다 면밀한 비교·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V. 남북 교류정책 비교

1. 대북지원 태도

2011년 남한주민들에게 대북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9.8%로 나타나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22.3%)보다 17.5%나 높았다. 2010년에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였다. 이는 연평도포격 사건 이후 대북지원에 더욱 소극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물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43.4%였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56.4%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보

다 13%가 높았다. 이는 남한주민들의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크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반면, 북한주민들에게 대북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남한주민보다 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67.3%로 높았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10%로 매우 적었다. 또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응답 비율은 71.2%로 나타났고,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16.3%,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응답은 12.5%로 나타나 북한주민들 가운데 대북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견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남한의 경제투자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79.3%로 가장 많은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4.5%로 매우 적었다. 지난 4년간의 조사에서 2008년 82%, 2009년 75.7%, 2011년 79.3%로 나타나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높은 응답비율은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를 바라는 북한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을 비교해 볼 때 대북지원에 대해 남한주민들보다 북한주민들이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은 71.2%가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남한주민들은 22.3%만이 그렇게 대답하였다. 반대로 북한주민들은 ‘줄여야 한다’와 ‘중단해야 한다’에 16.3%, 12.5%로 대답한 반면, 남한주민들은 ‘줄여야 한다’ 39.8%, ‘현재수준 유지’ 38.0%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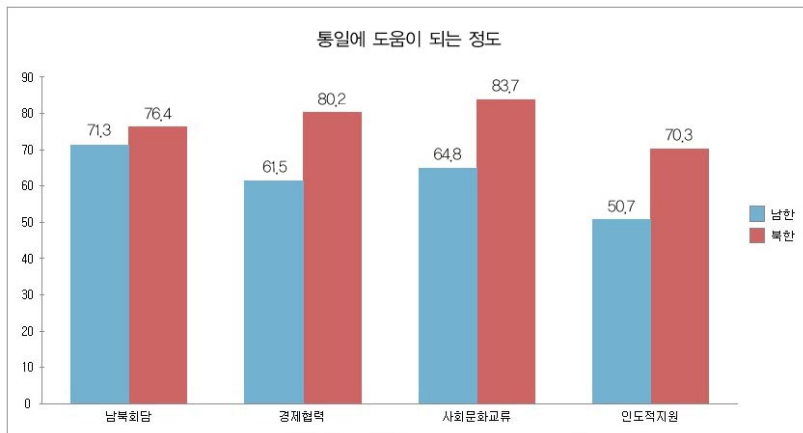
대북지원을 늘리는데 반대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한 것과는 반대로 실제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을 긍정적(67.3%)으로 생각하고 더 늘리는데 찬성(71.2%)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원, 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대북정책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에 정치회담과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정기적 남북회담 71.3%, 경제협력 61.5%, 사회문화교류 64.8%, 인도적 지원 50.7%로 응답하였다. 정기적 남북회담이 통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고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낮았다. “쌀,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50.7%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여 다른 항목, 즉 정기적 남북회담,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에 비해 낮은 응답율을 보인 것이다.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남한주민들이 분배의 투명성과 퍼주기 논쟁 등의 영향으로 다른 사안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반면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보다 대체로 남북 간의 교류, 지원, 회담 등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더 많이 피력하였다. 특히 경제협력(80.2%)과 사회문화교류(83.7%), 인도적 지원(70.3%)이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남한주민들보다 평균 20% 이상 높았다. 북

한주민들은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 역시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낮게 응답하였다. 즉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의 기여도를 80% 이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70.3%로 낮게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북회담(76.4%)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즉 남한주민(71.3%)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그 기여도를 낮게 보았다.



〈그림 11〉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2011)

교류정책에 대한 남북주민의 의식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남북 간 교류와 지원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남한주민들은 정기적인 남북회담과 같은 정치대화가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북한주민들은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와 같은 비정치적 문제가 통일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판단했다. 즉 남한주민들은 통일문제를 정치대화가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정치대화보다는 경제와 사회 문화교류가 통일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북한주민들이 남한보다 월등히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나, 남북한에서 모두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그러한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부정적 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VI. 종합평가 및 결론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은 통일의 당위성과 기대이익, 교류정책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상호인식과 이질성, 인지도 등에서는 높은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통일 당위성에 대한 생각은 남한에 비해 북한주민이 월등히 높으며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 기대감도 북한주민이 훨씬 높게 갖고 있다. 때문에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정치대화, 인도적 협력 등 남북 간 교류정책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식도 북한주민이 남한에 비해 월등히 높고 교류와 지원 정책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한은 여전히 서로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상호간에 불신과 불안감이 높게 자리잡고 있어서 협력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적대/경계 대상이라는 양면적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러한 양극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남북한은 남북주민의 이러한 통일의식의 현실을 토대로 대북·통일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한국민들은 50~60% 정도만이 통일의 필요

성에 공감한 반면 북한주민들은 대다수인 95~99%가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남한주민들은 20년 혹은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장기적 전망이 우세한 반면 북한주민은 '10년 이내'(29.7%) 혹은 '5년 이내'(18.9%)라는 단기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 기대감에서도 북한주민들은 집단과 개인수준에서 모두 약 90~95%라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남한주민들은 통일문제를 현실적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통일의지와 기대감이 점차 줄고 있으나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통일을 계기로 민족부흥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통일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통일의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의 효과와 비용의 측면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홍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 간에 형성되고 있는 상호불신과 불안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한이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협력대상'이라는 긍정적 인식(남한주민 47%, 북한주민 50.5%)을 여전히 가장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남북대립과 갈등으로 남한주민들의 대북 '적대'와 '경계' 의식이 6~12% 수준에서 16~17%로 높아졌으며, 북한주민들의 대남 경계의 식도 2009년~2011년 사이에 6.8%→21%로 급증했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남한은 78.35%, 북한은 61.1%를 기록했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도 남한 주민 모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회의적 사고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높아졌다. 특히 남북한 모두 젊은층에서 적대/경계의식이 강화되고 있는데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새로운 세대가 상호간에 적대와 경계의식을 쌓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점에서 통

일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앞당기고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추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의식변화 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분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주민 상호간 문화접촉 경험은 남한주민보다 북한주민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주민의 북한문화 접촉은 30~40% 정도인데 비해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접촉은 60~70% 수준으로 3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인지도 측면에서도 2011년 남한주민의 북한 인지도는 평균 60.6%인데 비해 북한주민의 남한 인지도는 평균 72.3%로 북한주민이 남한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남한에 북한문화가 유입되는 것보다 북한에 한류가 유입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사회가 극단적 폐쇄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우리의 상식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흥미로운 대목이다. 물론 이 조사결과가 탈북자 샘플에서 오는 편향성을 가질 수 있으나, 남북 상호간 문화적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주민 통일의식에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기초로 향후 남북한 사회현실에 적합한 교류정책과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한주민들은 정기적인 남북회담과 같은 정치대화가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북한주민들은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와 같은 비정치적 문제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남한주민들은 통일문제를 정치대화가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정치대화보다는 경제지원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교류와 지원의 통일에의 기여 정도에 대해서도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에 비해 20% 정도 높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탈북자들이 대북 지원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여론과는 달리 북한 내부의 주민들은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현실분석을 기초로 볼 때, 남한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남북대화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호감도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지원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접수: 2012년 4월 30일 / 수정: 2012년 5월 15일 / 게재확장: 2012년 5월 15일

【참고문헌】

- 김병로 · 김병조 · 박명규 · 서호철 · 은기수 · 정은미. 『2007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 박명규 · 김병로 · 김병조 · 박영호 · 정은미. 『2008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소, 2008.
- 박명규 · 김병로 · 김병조 · 박정란 · 정은미 · 이상신. 『2009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 박명규 · 강원택 · 김병로 · 박정란 · 정은미 · 이상신. 『2010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 박명규 · 김병로 · 강원택 · 정은미 · 이상신 · 박정란. 『2011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1.
- 박종철 · 박영호 · 손기웅 · 전성훈 · 최수영.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서재진 외.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 윤인진 · 채정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상호인식』.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2010.
- 최수영 · 김성철 · 김병로 · 이우영. 『1994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 최수영 · 이우영 · 조민 · 최진욱.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 한국방송 남북협력기획단. 『2011년 국민통일의식 조사』. 서울: 한국방송, 2011.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CBS, 2009.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ed.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nuary 2011.
-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 변화: 2008~2011.”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 (2012).
- . “통일의식 변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북정책 방향.” 『사회과학연구』 제33

- 집 1호 (2009).
- . “남남갈등의 지형분석: 지역과 이념.” 『일상 속의 통일: 세대, 지역, 젠더, 이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움, 2009.11.5,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남북간 시각차와 접점찾기.”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17주년 기념 대토론회』. 민주평통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공동주최 (2009.2.13~14, 안면도 오션캐슬).
- . “국민의식 보수화가 대결정책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화해』 2009.1~2, 통권 36호.
- . “통일 · 북한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통합』. 민화협 주최 2008 정당 · 종교 · 시민사회단체공동회의 (2008.12.11,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북 마케팅을 기대한다.” 『민족화해』 2008.7~8, 통권 33호.
- . “국민통일의식 변화의 시계열 비교분석.” 『한국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특별심포지움 (2007.10.10, 대한상공회의소).
- 전미영. “북한 김정일정권의 대남 · 통일정책 변화: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 (2006).
- 전현준.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전망.” 『통일정책연구』, 7권 1호 (1998).
- 최경희. “북한사회변화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8.31,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Kim, Philo (Institute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Choi, Kyung-hui (Toky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ttitudes that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generally have toward unification as well as their values, which ar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Focusing on the attitude toward unification, this paper basically examines four areas; the necessity and expectation of unification, the two Koreas' mutual recognition, awareness of cultural difference, and exchange policies.

This paper reveals a strong similarity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the belief in the necessity of and expectation associated with unification and exchange policy, while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mutual recognition and awareness. That is, North Koreans are more likely than South Koreans to believe that unification is necessary and to have a higher expectation that unification will result in much greater economic wealth. In the same context, North Koreans have a high expectation and much hop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economic assistance from the South. They believe that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cluding political dialogue, economic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will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However, since the two Koreas are aware of the existence of cultural differences and mutual distrust

and anxiety between them, they have formed a dual perception of both their cooperative partnership and a hostile and/or alert partnership. In particular, as recent North-South relations are in infarction, the polarization of the dual perception has been strengthened.

Both Koreas should prepare a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reality of the unification attitudes of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A comprehensive policy needs to be developed in order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and a sense of policy transition is desperately needed in order to help reduce the level of mutual distrust and anxiety between the two Koreas. Als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needed to enhance the vision and zeal for unification,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policies to promote inter-Korean dialogue to meet the expectations of South Koreans, and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assistance policies that encourage favorable sentiments of South Korea to North Koreans.

Keywords: unification attitude, unification attitude survey, national attitude, mutual recognition, mutual awareness, exchange policy, assistance to North Korea.

김병로

미국 럿거스(Rutgers)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와 논문으로는 『북한-중국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김정은 후계체제』,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 종교인 가족의 존재 양식에 관한 고찰: 기독교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최경희

현재 동경대학대학원에서 박사논문 집필 중이다.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 강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연구원을 역임하였고 주요 논문으로는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북한: 북한의 인식과 국내적 대응”(일어), “김정은체제의 ‘강성국가’ 건설전략과 전망: ‘지식경제강국’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